

지역국회의원 20명에게 '시민공천배심원제' 물어보니

“배심원 구성 공정성 담보 장치 필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취지에는 찬성하나 현재의 구성안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공천 방법은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등을 거치는 최종 의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 6명 신중·유보 9명 반대 4명
“취지에는 찬성...보완후 도입해야”

세부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서갑원 의원은 “발상 자체는 좋으나 당원 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윤석 의원은 “좋은 제도로 생각되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며 각각 유보 또는 신중을 보였다. 강운태 의원은 “전남도당 위원회 지역에 한해 부분적·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낙연 의원은 “지방보다는 중앙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김재균 의원도 “정당정치, 책임정치에 배치되며 공정성 시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 도입은 무리”라고 답했으며 조영택 의원은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는 적절하지 않고 지방의원 공천에 도입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혁신위의 공천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상천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민 배심원제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입장

찬성	신중/유보	반대	무응답
박주선, 김영진, 김성곤, 유선호, 강기영, 이윤섭	박지원, 김효석, 이낙연, 강운태, 최인기, 우윤근, 서갑원, 김영록, 이윤석	주승용, 김동철, 김재균, 조영택	박상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심원 구성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각각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취지와 명분에는 찬성하나 현재의 안으로는 지역 정치 여건상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최인기 의원은 “지역 현실과 공정성 담보 등을 고려한 더욱 명확한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실력 광주’ 완성의 해”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신년 간담회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올해를 ‘학생 중심의 으뜸 광주 교육’을 완성하는 해로 선포했다. 안 교육감은 6일 시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체·덕·지(體德知)의 교육 여건 강화를 통해 광주를 한국 교육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중심 교육, 인성 교육 강화, 교육복지 증진,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등 10대 주요 시책과 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올해는 지난 5년간 광주 학생들이 이룩한 수능 성적 1위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적 성과와 열매를 맺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이를 위해 존중과 배려의 인간 친화적인 아름다운 학교문화 창출,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교실 수업역량 강화로 실력 광주 위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 급식 실시 및 결식 학생 제로화 사업 추진 ▲공문처리 전담교원 배치 및 행사 축소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 ▲외국어·문화예술 교육 등의 강화를 통한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



니 ‘여러 줄 세우기’ 교육 실현 등도 추진한다.

안 교육감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선거는 6월에 치르지만 임기가 11월까지인 만큼 ‘1등 광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되면 발원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교육감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 관련 선거법 개정추진에 대해서는 “환자를 고치는 의사를 아무나 할 수 없듯이 교육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시교육감 시민후보 추대 제동

선관위 “선거관련 행사 참여 불법”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중인 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에 제동이 걸렸다.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6일 “이번 주로 예정된 후보 서약식을 비롯해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일단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7일 서약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정견발표회(14일), 토론회(21일)를 거쳐 다음달 초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도 안된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후보가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후보자가 없는 토론회 등이 사실상

무의미한 점을 고려하면 추대위의 활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셈이다. 추대위는 “시민 후보를 추대할 권한 자체를 박탈한 현행 선거법은 상식에 반하고 결국 교육 관료와 정치권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악법이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추대위 좌화동 대변인은 “후보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행사는 일단 보류하고 추대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추대위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이달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추대위는 최근 공모를 통해 장휘국(59·시교육위원과 광주대 이민원(52·글로벌경영학과) 교수 등 2명의

신청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2006년 첫 시행 시민공천배심원제 신선한 돌풍 불구 부작용 만만찮아

민중 광주시장 도입...관심 끌었지만 조직 동원 등 말썽

민주당이 이번 6·2지방선거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직전 지방선거인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유종필)이 한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을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후보 경선에 이 제도를 도입, 열린우리당과의 선거 경쟁에서 초반 선거 분위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시민배심원제에 따르면 시민배심원단 3명으로 예비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 후 시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여론조사를 해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시민배심원단은 광주시장 공천심사특위 산하기구로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50~60명으로 구성했으며 배심원단 방식은 공모와 전화로 참여의사를 타진한 뒤 무작위 추출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배심원단은 각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에서 3~4시간 동안 패널 토론 방식으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배심원단 채점 후 현장에서 압축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론에서는 밀실공천을 타파하고 시민 대표들이 패널로 나서 여론 분위기를 주도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할 수 있어 신선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장 편집실장이었던 김경호씨는 “시민 배심원단 경선은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

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시민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에게 시민배심원단 경선을 거치게 함으로써 구전홍보 효과를 보게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시민배심원단 모집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 불공정 경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 때문에 불공정한 배심원단 구성을 이유로 후보자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심원단

경선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사퇴한 후보들은 “과거 ‘금권·밀실·패거리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현역의원 등 기득권 세력들이 조직을 동원, 배심원단 신청서를 5천~1만매를 돌려 접수하는 등 자신의 지지자들이 배심원에 많이 선정되도록 했다. 때문에 우호적 배심원수가 미리 파악하면서 배심원단 경선 전에 승패를 미리 파악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배심원 중간 브로커들이 나타나면서 예비후보들에게 뒤통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5년 전 시민배심원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배심원제는 그때와는 달리 진행되었지만 역시 우려스런 대목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